

◆ 전기·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 개선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산업부,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중·장기 정책 방향 수립('18. 6)

□ 추진 배경

- (신성장동력 확보) 전기차·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 마련
 - * 해외의 경우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(노르웨이, 네덜란드, 영국), 디젤차 운행 제한(독일 슈르트가르트), 친환경차 의무판매제(미국 캘리포니아주) 등에 따라 미래자동차시장 확대에 주력

□ 보급 현황 및 그간 추진 성과

- (보급 현황) 전기차 25,593대, 수소차 177대가 누적 보급 되었으며 충전기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1,790기, 수소충전소*가 12개소 구축('17)
 - * 현재 9개소가 설치진행중이며 '18년 10개소 추가 설치 계획
- (추진 성과) 전기·수소차 성능 개선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*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수요는 대폭 증가
 - *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국·공유지 임대료 감면 허용,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 등

□ 친환경 차량 및 인프라 중장기 보급목표

- '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, 수소차 1.5만대를 보급하고 1만대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, 310기의 수소차 충전소 구축 목표 수립

< 보급 목표 : 누적(당해연도) >

구 분		'18	'19	'20	'21	'22
전 기 차	전기차 (천대)	56.5 (26.5)	98.5 (42)	156.5 (58)	236.5 (80)	350 (113.5)
	급속충전소 (천기)	3.7 (1.5)	5.2 (1.5)	6.7 (1.5)	8.2 (1.5)	10 (1.8)
수 소 차	수소차 (천대)	0.9 (0.7)	2 (1.1)	5 (3)	9 (4)	15 (6)
	충전소 (기)	39 (18)	80 (41)	130 (50)	200 (70)	310 (110)

□ 6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

- (차량보급 활성화) '22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은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, 핵심부품 발전 속도,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 조정
 -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충전에 사용되는 기본요금 면제, 전력량 요금 50% 할인 체계 유지(~'19)
- (충전인프라 확충)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설치, 전국 단위 충전소 구축 로드맵 마련(~'18), 태양광 친환경 충전소 구축, 공공주택 설치 의무 강화
 - 지역별 적정 충전기수, 급속·완속 비중, 충전기 이용 패턴 등을 비교·분석하여 충전기 사용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고,
 - 태양광 활용 전기차 충전소 보급(30개소, '18~'19) 및 폐배터리 활용(ESS, '20~), 신규 공공 주택 등 충전기 설치 의무 강화*를 통해 인프라 보급에 기여
- * (현재) 500세대 이상, 0.5~2% → (개선) 300세대 이상, 2% 이상
- (핵심기술 개발) 주행거리 증가를 위한 배터리·구동시스템 성능 향상, 충전용량 증대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슈퍼차저 기술 개발
 - 고성능 리튬이온 기술 및 차세대 배터리('21)와 400kW급 고용량 초고속 충전기를 개발('18~'21)하여 핵심 부품의 성능 향상을 선도
- (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)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정책 시행

구 분	주요 내용		비고
	현 황	개 선	
전기차 안전검사 기준 개선	· 내연기관차량 위주의 검사항목 - 승용차 정기검사 의무(2년주기)	· '고전원전기장치' 검사기준 마련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'18)	국토부
전기차 분류기준 마련	· 전기차는 단순 '규격'으로만 분류 - '출력' 분류 기준 미수립	· 모터출력 분류기준 마련('19)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	국토부
운송사업용 전기버스 지방세 감면	· 운송사업차량 취득세 감경('18.12) - 시내버스 등 취득세 50% 감면	· '21.12 까지 취득세 감경 기간 연장 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	행안부

- (민간 역할 확대) 차량 제작사의 충전소 보급 역할 강화,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사후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
 - 현대자동차는 찾아가는 충전서비스(7kW), 영업지점 충전기 무료 설치, 서비스 센터 구축·운영(100여개 거점) 등 다양한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

<출처>

1. 수요관리 부문

- 국내이슈 <전기·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>
 - 전기·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(관계부처 합동, 2018. 6. 8)